

일본정부 민간인 전후보상 외면

1/3

지난 6월 일본 전국에서 <8월의 광시곡>이라는 영화가 일제히 개봉돼 화제를 모았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최신작으로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스타의 한사람인 리처드 기어가 일본인 배우와 함께 주연으로 등장한다.

이 영화는 여름방학에 나가사키의 할머니집을 방문한 4명의 청소년이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술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역사에 접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일본계 이민과의 혼인을 통해 친척으로 설정된 한 미국인 청년이 나가사키로 날아와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비는 장면이다.

일본 문부성의 추천작품에 들어간 이 영화의 제작 협찬자 명단에는 일본의 유수기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1991년은 일본이 12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에 돌입한지 꼭 50돌이 되는 해이다. 앞에서 영화이야기를 예로 든 것은 패전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일어난 일본이 태평양전쟁 50돌을 어떠한

데 명단이 있을 리가 있겠나." 이런 비상식적이고 망발에 가까운 발언들이 일본 국회의원이나 관리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위대 해의파병, 군비확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각국의 피해자 유가족과 이와 연대한 일본의 시민운동 그룹이 노력한 결과, 각종 자료가 발굴될 때마다 자료가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가 하며 보상과 사죄를 가능한 한 이리저리 피해온 일본 정부의 자세가 얼마나 불성실했으며 도리에 어긋난 것이었는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올 들어 각종 재판청구,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일본시민과의 연대모임 결성 등으로 더욱 활발해진 '피해보상' 운동의 움직임은 앞으로 구체적인 소송과 사회여론화 운동 등을 통해 계속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갈 조짐이다.

구체적인 피해사태에 따라 피해보상의 요구내용과 방법도 다른 각 단체들이 지난 8월 3·4일 도쿄에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열어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한 예이다.

의 최악상 가운데 가장 비인도적인 부문으로 꼽히는 '정신대' 즉 중군위안부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 50년 동안 가장 입을 굳게 다물고 계속 그 존재마저 부정해온 부분으로 그만큼 가해자에게는 '치부'이고 피해자로서는 참혹한 과거인 것이다. 정신대는 약 17만 명 정도로 추정돼 왔으나 아직도 정확하게 그 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속여 데려갔으나 전쟁 말기에는 트럭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끌고간 사실 등이 최근 '포획'작업에 참가했던 사람의 고백 등으로 밝혀졌다.

전쟁사료집의 관련 군의관 의견서에는 일본의 매춘부는 성병이 많으므로 젊은 조선 여자가 '황군' 장병에의 선물로 적합하다는 대목이 들어있어 민족 말살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일제의 전을 할 최악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실 은폐를 위해 종전이 되면서 많은 정신대원들이 만주·동남아 각지에서 학살을 당했으며, 소수의 살아남은 이도 수치심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기구한

그 하나가 국적조항이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한국(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수만명의 한국인 출신 전사자는 아직도 해마다 '대일본제국'을 위해 숨친 '호국영령'으로서 일본의 '신도' 의식에 따라 봉사받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합사를 거부하는 유족의 의사는 무시되고 있다. 전사 당시에는 대일본제국의 시민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B,C급 전범의 경우도 전쟁 당시 일본 국적이었으므로 징역은 살아야 하지만, 출소 뒤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므로 돌봐줄 수 없다는 '이중논리'에 희생된 대표적 예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제일 한국(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부터 이탈시킨 52년 직후부터 전사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환자, 피폭자 등을 보상하는 각종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여 연금과 보상을 실시해 왔다. 현재도 매년 2조엔(약11조원)을 전쟁희생자 원호에 산으로 책정하여 군인유가족 약

징병·징용·정신대·원폭등 희생자 수두룩 반성기미없이 "우리도 피해자" 분위기 조성

분위기로 맞이하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문제도 일본 정부는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이라는 공식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데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확고한 간 상처는 아직도 아시아 각국 술한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며, 이 회오리길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전쟁으로 생겨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사례별로 간단하게 나뉘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징병되어 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전선에 배치됐다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다. 65년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한국인 출신 군인·군속 2만1천9백19명의 명단을 한국 정부에 양도했다.

두번째가 징용으로 강제 연행되어 중노동에 혹사당하다가 사망,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상당한 사람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갇혀 있는 사람

삶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여성단체들이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과 일본 쪽의 사죄·보상·역사교과서에 기록 등을 요구하며 일본 여성단체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네번째로 B,C급 전범 피해자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의 하나이다. B,C급 전범이란 일본의 군속으로 전선에 배치되어 포로 감시 등의 역할을 맡아 종사하다가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당하거나 장기간 복역을 강요당해야 했던 사람들로 그 수는 수백명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나 '악한 범죄'로 분류된 사람

1백5십만명을 포함한 2백만명에 게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상을 거부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한국과의 보상은 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 법률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전쟁책임을 묻는데는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양국간의 정부가 협정을 통해서 포기할 수 있는 청구권은 '전쟁배상' 부문이지, 민간이 받은 피해부문은 여기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